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

2014. 11. 5

양진홍 연구위원



국토연구원



Contents

I

서론

- I-1.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 변화
- I-2. 국토·도시부문 주요이슈
- I-3. 국토·도시부문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

II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

- II-1. 도시공원화 전략
- II-2. 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구축
- II-3. 신한류 기반의 의료문화관광 기반 확충 : 의료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
- II-4. 경쟁력 있는 내일의 도시 만들기 : 서민의 삶을 고려한 공공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

III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체계

- III-1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추진조직 및 추진과정
- III-2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투자소요액 추정
- III-3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자원조달과 투자계획
- III-4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추진효과

IV

결론

- IV-1. 지역이 창조의 중심, 문화중심의 특색있는 발전
- IV-2.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가치중심의 지역발전
- IV-3. 지역발전의 새로운 제도개선 필요



KRIHS

I

서론

I-1. 글로벌 트렌드와 환경 변화

I-2. 국토·도시부문 주요이슈

I-3. 국토·도시부문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

글로벌 트렌드와 환경 변화

- 국제사회; 고령화, 신한류의 지속과 외국인 의료문화관광객의 급속한 증가
- 사회·경제·문화; 저출산 고령화·성장잠재력의 변화, 노인빈곤 등 사회양극화 심화, 청년실업, 범죄·안전·사회적 분위기·태도, 국가부채(정부, 가게, 기업)
- 기후환경·자원산업; 기후변화와 식량, 에너지 등 자원수급, 도시재해 예방
- 대외협력;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통일, 중진국과의 전략동반성장

〈국토·도시부문 패러다임의 전환〉

부 분	미래 도시환경의 변화	
	종전환경	미래환경
1. 도시개발 목적동기 /개발방식수익모델	이윤동기(개발이익 창출) 개별사업의 수익구조	가치창출, 가치경영 결합개발방식(결합비즈니스모델 구축) 연계개발 중시
2. 토지이용공급방식 /서민생활 안정	소유중심, 분양(시장)	이용중심, 임대(시장)
3. 도시사회환경 변화 /인구, 도시환경, 기후	청장년 중심의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도시환경오염 심화 대규모 도시재해방재 취약	저출산 고령화, 평균수명 증가, 중형 인구구조 ⇒ 도시생활시스템 개조, 고령친화도시 도시 숲 조성, 환경기술개발, 재해에 안전한 도시,
4. 도시인프라 공급활용 /한류문화관광기반	효율성 정(靜)점(點)면(面) 활용 운동시설, 개별시설/고도자연환경	지속가능성, 쾌적성 확보 동(動)선(線)망(網), 연속성 활용 걷는 길, 공원녹지(網)/의료문화관광
5. 의사결정경영 주체 /참여활동방식	국가공공 공기업 개발관리중심	시민(단체) 참여, 시민경영 협동조합(비영리공익법인) 시민봉사조직, 기획중심
6. 재원조달	정부재정, 기업	시민자본형성, 시장(市場), 기부금품

국토 · 도시부문 주요이슈

- **공원녹지 확충, 도시숲 가꾸기 등 도시환경 개선;**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일몰제 2020년 6월말(제도개선, 추진체계 등)
 - 도시공원용지 지속적 확충 필요,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연계
- **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도시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**
 -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$7.63\text{m}^2/\text{인}$ 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
 -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1,000여 명이 사망하고 대기오염에 따른 각종 질환으로 매년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
- **산지가 관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; 산지의 활용 및 토지소유구조 개선, 기후변화 대응, 여가휴양산업, 둔산정책 필요(국토의 63.8% 산지)**
 - 산지를 활용하고 싶은 자는 땅이 없고, 땅이 있는 자는 산을 가꾸고 싶은 유인이 없음
 - 도시주변 산지의 약 77%가 사유지, 국공유지 23% 내외(전체 산림의 사유림 비율 69%)
 - 가구별 산지의 소유면적은 매우 영세한 구조(임가구당 2.13ha, 5ha 미만이 90% 차지)
- **수변공간을 다목적 휴양공간으로 숲조성, 수질개선 및 방재와 연계; 국토품격 향상**
 - 동서남해안, 4대 강변을 비롯한 도시주변 수변구역의 숲 및 침전지 조성
 - 비점오염원관리에 효과적, 낙동강 상류의 대규모 축산단지 증가, 침전지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(하수종말처리장보다 비용이 싸고 직접효과 발생)
 - 연안침식 방지

국토 · 도시부문 주요이슈

● 도시재생 활성화; 아파트단지 재건축에서 탈피, 문화생산기능 강화

- 도시재생특별법의 한계극복, 추진체계 정비, 서민의 생활환경 개선 우선고려
- 경쟁력 있는 도시, 바람직한 내일의 도시
- 군부대,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 등) 이전적지 활용, 기능 · 시설재배치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, 대안제시를 통한 갈등조정 및 도시기능의 질적 개선

● 고령화 대책, 인구쇠퇴지역의 활력증진

-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가속, 농어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
- 노인계층의 의료비 급증 추세는 곧 재정부담 증가로 직결
- 2004년 65세 이상 노인 375만 명(7.9%)의 의료보험진료비가 5조 1,364억(22.8%)에서 2010년 472만 명(10%)에 11조 1,705억 원(28.1%)으로 2배 이상 증가

● 신한류 기반의 외국인 의료문화관광 대응 ; 의료 · 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

- 신규 택지개발 중심에서 탈피, 아파트단지 중심의 침상도시 또한 탈피 : 건축문화
-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고부가 연구 · 생산 · 서비스기능 강화 ; 복합클러스터
- 도시 및 삶터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정비

국토 · 도시부문 주요이슈

- **소유중심에서 오는 사회계층간 불평등 심화, 이용중심으로 국토이용체계 개편**
 - 소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국토관리시스템의 대전환
 - 적정수준의 임대산단, 임대주택 공급, 국토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
 - 임대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, 인생2모작을 부담 없이 출발, 노인빈곤 대책
- **가치체계의 전환, 새로운 고용과 성장을 통한 복지체계(고용 없는 성장에서 탈피)**
 - 공유경제, 공정무역, 가치기반의 생산과 소비, 사회적 잉여 ⇒ 사회적 가치 확립과 실현
 - 협동조합형 생산·소비·투자 조직 육성(사회적 기업 등)
 -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 ⇒생산적 복지체계 확립, 국가부채 감소(정부, 가계, 기업)
- **탈북민의 남한 내 유연한 정착 방안 ; 남북통일 대비과제**
 - 2024년을 전후해 남북통일에 획기적 변화 예상
 -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시 탈북민이 5년간 120~150만명 발생 추정, 대도시를 비롯한 남한 내 유연한 정착방안 마련이 통일을 위한 첫 관문

국토 · 도시부문의 창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

- 국토도시부문의 기존 이슈 해결과 새로운 미래지향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
- 국토도시는 하나의 삶터, 연계성을 고려하고 공간정책을 통해 구현
 - 일자리 창출, 내수경제 활성화 등 연립방정식 해법처럼 관련요소를 함께 풀어야, 해법과 결과는 시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
- 창조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부터 필요 ⇒ 지역경제 활성화

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토 · 도시부문의 도시공원 부족, 저출산 고령화, **쾌적한 생활환경 조성,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..**
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! ⇒제도 개선, 창조경제로 전환

- 격발사업을 찾아라! : 선순환구조의 시작은?
 - 지역 스스로가 지역발전시스템 기획·구축
 - 시스템의 시작은 함께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
(시스템의 구축, 팀웍이 이뤄지기까지 시간필요)
 - 공원녹지 조성(숲가꾸기)⇒ 고령친화산업⇒ 의료문화관광⇒도시재생 · 공원녹지

※ 용광로 불 지피기(아궁이)

- 목표 : 쇠를 녹여 쇳물을 만드는 일
- 사전준비 : 용광로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. 쇳물의 고온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고로내부에 내화벽돌을 쌓고 흙을 바르고 말려야 한다.(용광로가 녹아 내리지 않도록 준비)
- 불지피기 : 불쏘시개를 통해 코르크스 등 고품질의 연료가 타도록하여 내부온도를 높임
－ 불쏘시개의 역할은 불을 붙이는데 있으며, 그 자체가 쇳물을 녹이는 것은 아님
- 용광로는 쇠를 녹이기에 앞서 스스로를 먼저 달궈야 함
(경제도 정책도 심리.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,
서민의 얼어붙은 마음에 봄바람(훈풍)이 불게 해야 정책이 스며들 수 있음)



KRIHS

II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

- II-1. 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- II-2. 저출산 고령화 대책
- II-3. 신한류 기반의 의료문화관광 기반 확충
- II-4. 경쟁력 있는 내일의 도시 만들기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일몰제 대응(2020년 6월말)

- 환지 및 결합방식을 활용한 생활공원, 도시농업공원 조성 필요
- 도시환경오염의 심화,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
- 생활권 주변 걷기·달리기·자전거·생활승마 공간(생태회랑), 힐링 공간(숲) 필요

□ 추진방법 및 내용

● 거점지역별 국가도시공원 조성

- 거점지역에 복합기능의 광역도시공원(국가도시공원) 조성,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 - 사회적 기업과 일반 국민의 기부금품 모집도 병행 추진
 - 지자체 부담중심의 공원조성은 한계 직면, 다양한 방식의 복합공원 조성
- 환지방식과 결합방식을 통해 공원녹지 조성과 토지민원 해소, 정부재정 지원 최소화
 - 공원녹지 400조원, 그린벨트 1000조원 ⇒ 1400조원의 약 60%에 해당하는 800조원 부동산자산 유동화, 신규 토지공급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□ 현행 제도상의 주요 문제점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한 근거 마련(제21조), 제도적 한계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(국내 성공사례 없음)
 - 민간 공원사업 추진시 공원면적 10만^m² 이상 확보, 70% 이상을 기부채납(동법 제21조)
 - 10만^m² 이상의 토지소유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
 - 10만^m² 미만의 과소필지에 대한 대책 없음 ⇒ 통합개발 방식을 통한 추진 필요
 - 토지매입비 및 공원시설 설치비용은 전부 시행자 부담(동법 제39조)
 - 국가의 재정부담 약화, 공원조성은 지자체 소관업무로 재정부담 가중
 - 개발특례지역 분양을 통한 현실적 수익 보장이 어려움
 - 부동산 시장 여건에 특례사업의 성패가 좌우됨
 - 추진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
 - 실질적인 공원녹지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, 개발제한구역, 보전산지 등은 현행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」으로는 민간개발이 불가
- ※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(2014. 10)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● 생활권별 건강문화생태회랑, 힐링 숲, 둔산정책 실시

- 잠자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를 쾌적한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 : 생활권 단위
- 생활권 주변에서 안전하게 걷기·달리기·자전거·생활승마 공간 제공(생태회랑)
- 도시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힐링 공간(도시숲) 조성, 도시농업공원

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□ 수변공간 활용

● 수변 명품숲 ; 미래의 숲공원으로 조성, 도시공원 및 숲과 연계

- 수변공간에 일정 폭의 수변공원 설정 및 강변 명품 숲 조성⇒ 지형조건 · 지역여건 감안
- 비점오염원 차단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 · 폭원 확보
- 수변공간의 공익적 활용 및 미래 품격제고, 지역의 브랜드로 기능

● 휴양, 수상레저 및 관광거점화

- 친수자원인 강변 등 수변에 ‘고층아파트 및 주거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’ 을 탈피하고 일정 폭의 수변숲 조성 및 힐링주거공간 ⇒ 『명품숲 기반의 명품복합단지』 조성
- 도시 주변의 수변공간에 위락단지, 수상레포츠, 골프장, 생태유원지 등 시민들이 즐겨 활용하는 시설을 도입 ⇒ 휴양, 수상레저 및 관광거점화

※ 둔전제 : 군량의 확보나 또는 직접적인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주도하에 경작자를 집단적으로 투입하여 관유지나 새로 확보한 변방의 영토 등을 경작하는 토지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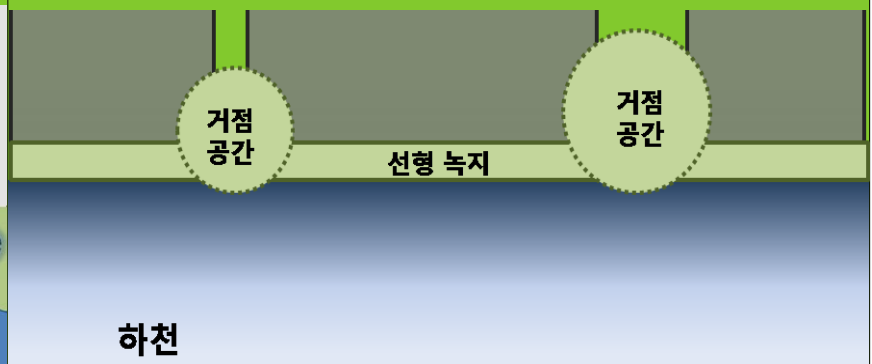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- 수변공간 활용 ; 수변 명품숲, 미래의 숲공원으로 조성, 도시공원 및 숲과 연계

〈 숲공원 기반의 수변공간 토지이용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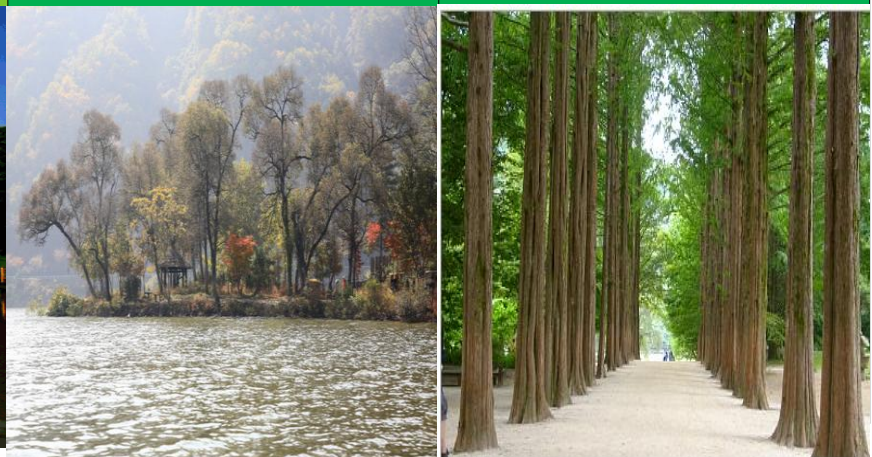
〈 숲공원 기반의 수변공간회랑 조성 〉



〈 담양 관방제림(潭陽官防堤林) 〉



〈 남이섬 전경(숲과 물의 조화) 〉

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<대단위 생태숲(Great Trinity Forest)조성>(미국달라스트라나티강)



<강폭을 넓히고 수림대 조성>(스위스 투어강)



북경 이화원은 역사와 전통건축, 숲과 물을 주제로 연간 400여만 명의 관광객 탐방 <이화원과 곤명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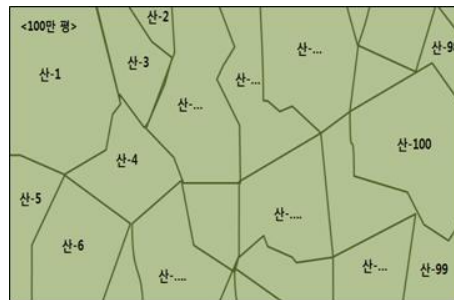
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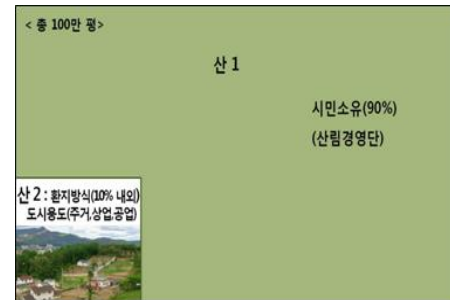
●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토지 조성 방법

- 산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거나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부재지주, 휴양촌 개발을 원하는 산주 등에게 환지방식 활용 및 공원개발 채권(가칭 綠債) 발행을 통해 공익용 토지 확보
- 대상토지 100만평에 환지방식을 적용, 토지의 10% 내외를 도시적 용도로 활용하여 산주에게 주거 및 상업용지 공급, 90%의 공익용 산지 확보, 10~100만평 단위로 환지 추진(도시휴양공원 조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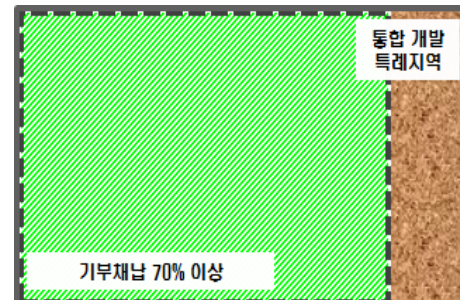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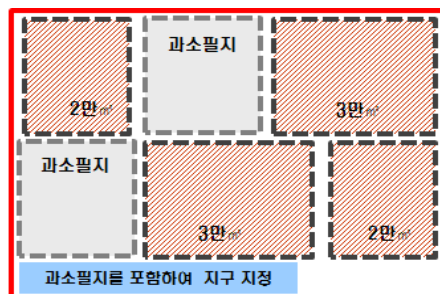
(당초) 영세 임가구 중심의 개별 소유



(변경) 환지방식을 통한 공원녹지확보



<환지방식을 통한 공원녹지 확보>



<환지방식과 개발특례지역 지정을 통한 통합개발>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□ 기대효과

- **그린벨트 포함 1400조원의 약 60%에 해당하는 800조원 부동산 자산 유동화로 내수경기 활성화**
- **둔산정책으로 청장년일자리 100만개 창출, 휴양림 및 도시숲가꾸기 (국토의 63.8%가 산지)**
- 순환 경제림단지 조성, 국산목재 자급율 제고(2011년 16%⇒2030년 60% 수준 제고), 각 시군 단위 산나물단지 등 임산물 특산지 조성 및 연계, 집성재 활용
- 도시농업 활성화, 도시 내 식물공장 조성, 도시저소득층 일자리 창출

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

- 국정과제 12(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화; 산림부국 실현)
- 국정과제110(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)

도시공원화 전략 ; 공원도시 건설

■ 둔산정책

- 삼국시대 둔전정책(조조의 신경제정책)에 비견되는 21세기 한국형 산림휴양산업 프로그램
- 청장년을 훈련하여 지역별 영림단 구성, 방치되어 있는 산지를 확보,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휴양림과 경제림 운영; 방치된 산, 청년 실업자, 숲이 필요한 도시환경, 국산목재 수요, 유휴자금

< 공원휴양림 예시 >



안면도 자연휴양림



축령산 편백림

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**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진행 중, 더불어 고령빈곤 문제 심화 (노인빈곤율 49.2%, OECD 평균 12.4%)**
 -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(21%) 예상, 2013년 말 현재 고령화율 12%, 평균의 착시현상
 - 노동력 부족현상은 물론 의료재정부담 증가,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저하 심각
- **일본의 30년 장기불황의 주된 원인으로 **고령화**가 첫 번째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고령케어시스템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시급함**
 - 농어촌은 2000년 초반부터 초고령사회 진입, 일본의 전철을 따라 가고 있는 정치·경제·사회 현상
- **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, 고령친화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, 특화단지 및 관련기능 집적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**
 - 의료기기, 제약, 노인용품, 고령케어서비스업 등 고령친화산업계의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
- **지방의 경제·문화가 붕괴되고 있으며, 지방문화의 계승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**
 - 인구감소, 고령화가 지속되어 읍급도시의 급격함 쇠퇴 진행, FTA대응 농촌농업의 경쟁력 제고

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

□ 추진방법 및 내용

- **고령친화산업 육성, 고령친화도시 조성 ; 단지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집적효과**
 -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, 고령케어시스템 구축
 - 문화유적 복원, 한국 전통 건축문화 구현과 결합 ⇒ 새로운 건축문화 정착
 - 고령화 문제와 장기임대주택, 공원녹지 조성,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해결
- **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;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수익자부담으로 장기투자 가능**
 - 고령자 복지주택, 고령친화산업, 병원 등 고령케어서비스, 교육 · 연구 등을 포함
 - 전국 거점지역과 관광휴양지를 중심으로 건강문화클러스터 42개소 단계적 조성, 고령자 300만명 유치
 - 고령케어·연구 · 생산부문 연계·결합을 통해 새로운 청장년 일자리 창출
 - 직접고용 약100만개, 간접고용 200만개 일자리 창출, 2030년까지 매년 22조원 민간투자 유도, 총 428조원투자
- **클러스터 중심의 협동조합형 결합방식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**
 - 주거, 고령친화산업, 문화단지 등 개별시설중심의 적자운영 탈피⇒ 이윤제로, 한계비용제로 도전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향토산업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

- 자연(향토)산업 기반의 식품산업클러스터, 지역먹거리체계구축 등 다양한 지역산업 네트워크 형성

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신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

〈 8대 고령친화산업 19개 전략품목 :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(2005) 〉

시 설	주 요 내 용	시장규모(2020년) 추정	
		매출액(억원)	모태산업 비중(%)
요양산업	재가요양서비스	93,661	100
기기산업	재택, 원격진단, 진료 및 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, 한방 의료기기, 간호지원 및 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	66,544	39.8
정보산업	홈케어, 정보통신보조기기, 노인용콘텐츠개발	396,732	7.5
여가산업	고령친화휴양단지	263,941	15.5
금융산업	역모기지제도, 자산관리서비스	185,241	5.8
주택산업	고령자용주택개조,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	75,045	4.9
한방산업	한방보건관광,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, 노인용한방화장품,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	46,738	31.2
농 업	고령친화귀농교육, 전원형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, 은퇴농장	29,564	100
총 계		1,157,466	10.3
※ 건강문화클러스터에는 이 외에도 화훼, 시설채소, 산약초, 보건의료·제약, 임업, 수산양식업, 축산 및 가공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음			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고령친화산업(산림자원)

□ **식물공장** : 온천수 및 지열을 활용한 식물공장을 도입하여 화훼, 시설채소 등 4계절 농업환경 조성



□ **집성재(集成材) 활용** :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·보급, 목재과학단지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및 확산, 한옥 등 전통 목재건축물 국산자재 활용

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한국형 건축양식 및 시설 도입

□ 궁궐양식의 활용, 장기 임대주택, 사회적 멘토 육성

- 궁궐 양식을 기본으로 한국형 건축양식 정립
- 전통적인 한옥양식과 현대적 기능을 결합한 지역별로 특성화된 한옥타운 조성
- 지역별로 고구려, 신라, 백제, 가야, 발해, 고려, 조선 등 각 시대별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해석과 복원, 궁궐양식을 활용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공급
- 각 시대별, 지역별 특색있는 읍성 성곽의 현대적 활용⇒ 한국은 성곽의 나라
 - 도심은 관광·소음방지 등, 농산어촌에는 기후변화 및 재해예방, 낚골시설과 연계 등 활용
- 클러스터 내 장기임대주택 지속적 건설, 정부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15% 달성지원으로 주택난 해소 및 주거복지 구현에 기여
- 클러스터 내 전문직 은퇴자로 구성된 사회적 멘토 300만 육성(2030년), 민족 통일을 위한 ‘붉은 전사단’으로 운영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건축문화의 정착

동궐도(東闕圖)

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다양한 성곽문화의 활용

화성전도 - 화성성역의궤 [華城全圖 - 華城城役儀軌]

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: 다양한 성곽문화의 활용

화성의 주요 시설물의 위치와 명칭



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: 지원법률

□ 운영방식, 재원조달 및 지원법률

-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순환거주방식 도입
- 고정불편의 입주보증금; 인플레 헷지를 통해 보증금 고정, 차세대 가입자의 부담경감
- 노후복지특별기금 조성, 수익자부담 원칙, 주택부금과 유사, 시민자본 형성
- 건강문화융합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(안)(국회 경제재정 소위 계류 중)

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

- 국정과제9(보건 ·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)
- 국정과제112(문화유산 보존 · 강화 및 활용 확대)
- 국정과제102(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)
- 국정과제106(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)

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

□ 기대효과

- 연구·생산부문 새로운 청장년 일자리 창출
(2030년까지 직접고용 약100만개, 간접고용 200만개 일자리 창출)
-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(제약, 의료기기 등 17개 부문 연구개발·생산) 및 사회적 기업 육성(*삼성과 현대의 고용보다 더 많은 직접고용 창출)
-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, 2030년까지 매년 22조원 민간투자 유도, 총 428조원 투자(수도권에 35%, 지방에 65% 투자)
- 청장년세대의 자원봉사 조직화, 사회적 멘토 300만 육성, 산업화 역군인 베이비부머 세대로 **붉은 전사단**을 조직하여 자원봉사 조직이자 통일의 역군으로 역할 재부여

* 이탈리아 통일영웅 가리발디장군의 의용군 '붉은셔츠' 참조

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

□ 직접고용효과

구 분	건강회랑 1개소당	전 국
직접 고용 인원 합계	22,450명/개소	898,000명
- 조경 및 관리인	$20\text{명}/\text{km} \times 60\text{km} \times 40\text{개소} = 1,200\text{명}$	48,000 명
- 도우미/복지사 등	$1.5\text{명}/10\text{인} \times 75,000\text{명} = 11,250\text{명}$	450,000 명
- 시설관리인(인/개소)	$1,000 \text{명}/\text{개소} = 40,000\text{명}$	40,000 명
- 전문 의료인력	6,500/개소	260,000 명
- 의료시설 관리인력	1,000/개소	40,000 명
- 시설이용 교육인력	1,500/개소	60,000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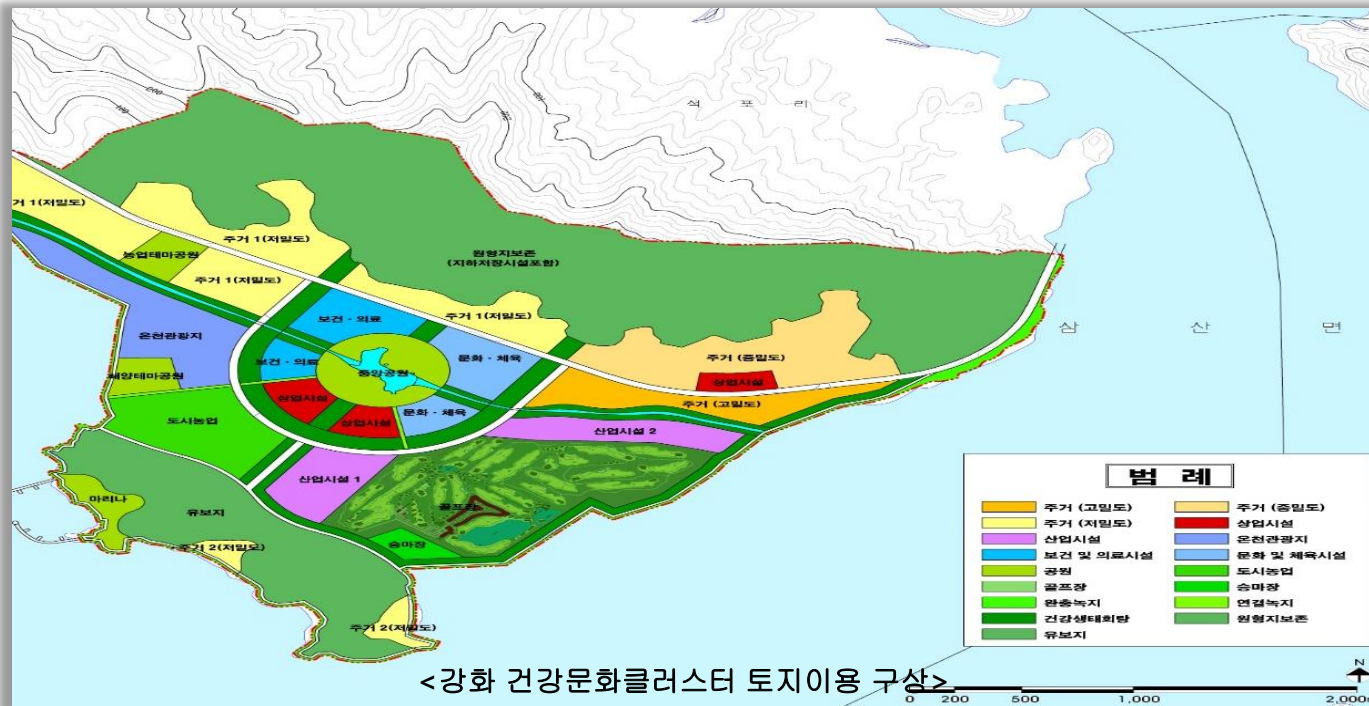
□ 사회적 기업 육성

- 2030년까지 정부가 삼성,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집단을 창출할 수는 없지만 두 기업집단의 고용규모를 갖는 사회적 기업 육성은 가능
- 2011년, 범삼성가와 범현대가에 고용된 직원은 48만4천명, 매출 165조원의 삼성전자가 10만 2000명, 매출 77조원의 현대차가 5만7천명, 매출액 30조원을 기록한 맥도널드는 전 세계에 종업원 170만명

저출산 고령화 대책 :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

□ 시범사업

- (대상 지역) 강화, 아산, 영주, 홍천, 고흥 등
- (대상 면적 및 투자규모) 면적 30~50만평(시범사업 추진), 5000억원~1조원 규모



의료문화관광산업 육성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신한류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동남아 의료관광객 2012년 15만명에서 2025년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 예상(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함)
- 외국인 관광객 2012년 1100만명에서 2025년 2500만명 급증 예상
- 첨단의료기술과 신한류문화를 결합하고 문화·관광·휴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예방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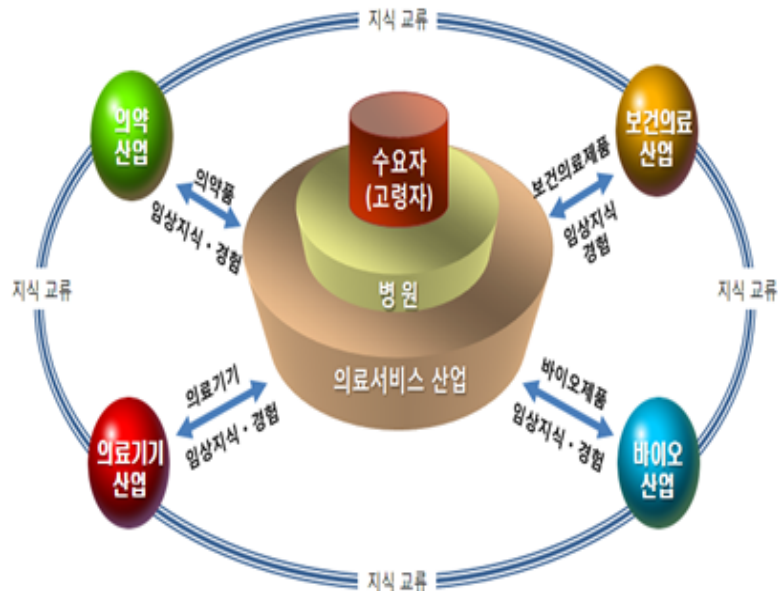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방법 및 내용

- 첨단의료기술과 신한류 문화의 결합; 의료문화클러스터 조성, 신한류 기반의 휴양관광산업 육성
- 2025년 의료문화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, 수도권, 부산, 동·서·남해안 거점지역 등에 의료문화클러스터 육성·지원
- 휴양레저시설, 회의전시(컨벤션)기능과 결합하여 운영
-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관광자원을 결합하여 ‘치료-회복-요양-휴식’의 one-stop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, 남·서해안 섬을 ‘심신치유(心身治癒)의 섬’ 브랜드화
- 숙박,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의료관광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니어세대를 위한 지원·교육기능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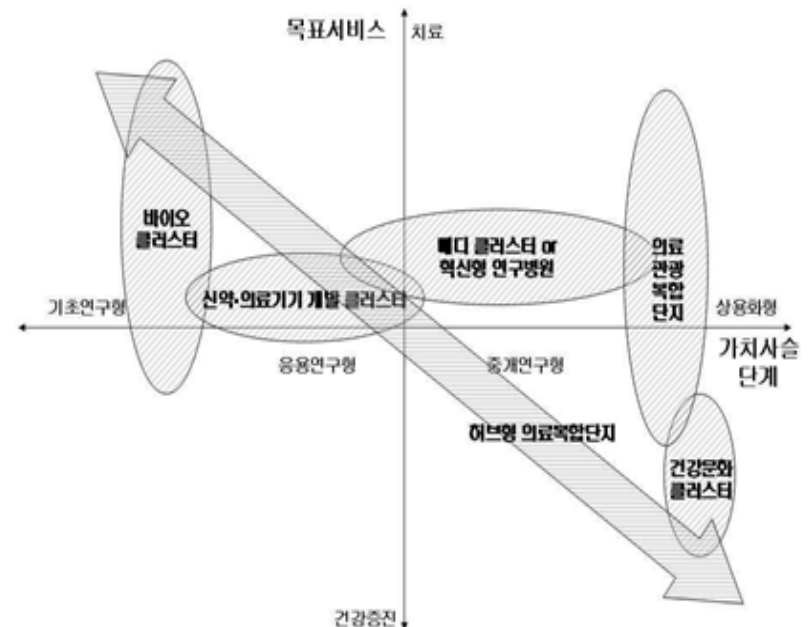
의료문화관광산업 육성

□ 추진방법

수요자 기반의 의료산업클러스터 체계



국내외 의료클러스터 6가지 유형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, 국내 의료클러스터 현황과 국제경쟁력. 2008.07

의료문화관광산업 육성

□ 추진방법 및 내용

● 지역문화중심의 휴양관광산업 육성; 지역경제 활성화

- 외국인 관광객 2012년 1100만명에서 2025년 2500만명 유치 기반
- 지방의 관광거점지역·관광단지 정비, 중저가 호텔·숙박시설 확충 등 문화관광기반시설 정비
- 로컬푸드시스템 구축, 계약재배 및 유통구조 개선, 새로운 관광농림수산업 육성 (브랜드 발굴, 지리산, 가야산 등 주요 관광지 리모델링 지원)

● 산림휴양과 해양휴양의 연계, 문화와 산업의 융합, 해양휴양·관광리조트 개발, 동·서·남해안권 투자활성화, 기존 개발사업 활성화(새만금 등)

● 남북한 및 동북아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동북아 공동번영프로그램 운영

- 세계평화공원 예정지(DMZ) 탐방프로그램, 개성·백두산·금강산 등과 연계한 패키지관광상품 개발
- 동북 3성,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 러시아, 일본 등을 연계한 동북아 관광크루즈 신루트 개발

● 지방의 건축문화, 역사문화자원 복원과 연계(건강문화클러스터의 궁궐양식 활용)

의료문화관광산업 육성

□ 자원조달 및 지원법률

- 노후복지특별기금에서 조성, 시민자본 형성, 민간투자 중심으로 유도
- 건강문화융합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(안)

□ 기대효과

- 2025년까지 의료문화관광객 100만명, 일반외국인 관광객 2500만명 유치기반 조성
- 정부는 보건·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,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로 진료·관광수익 2.9조원, 고용 5.4만명 창출(2020년 목표)

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

- 국정과제9(보건·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)
- 국정과제115(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)

비영리기관 중심의 도시재생추진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원도심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향한 국토·도시부문의 최대 현안
- 당초 많은 관심을 모았던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방식의 도시재생 시범사업만으로는 한계
 - 총 8개 선도지역(도시경제기반형 2개 + 근린재생형 6개), 계획수립비와 사업추진비 지원(250억 원 규모),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
- 도시재생 및 재정비 시장규모 1000조원 추정, 건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중요

□ 추진방법 및 내용

- 비영리기관 중심의 도시재생추진, 민간주도의 영리중심의 도시재생 탈피
 -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관협력체제 구축, 속도감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, 주민 재정착을 향상
 - 도시의 공원화 전략, 새로운 건축문화 형성, 가치·수요창출형 도시재생 연계 추진

비영리기관 중심의 도시재생추진

- **새로운 추진체계 구축 및 도시재생기금 조성**
 - 도시개발 및 재생, 노인복지, 주택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도시주거복지청 설치(국토부의 도시, 주택, 공원녹지 업무,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업무 통합)
 - **정부 및 공공에서 공원, 영유아보육시설, 도서관, 진입로 등 기반시설투자 강화, 민관협력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**
 - 도시재생·재정비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, 인접지역과 연계개발,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이 중요
- **재원조달 및 지원사항**
- 도시재생, 장기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금 100조원 조성
 - 갈등관리 및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도시재생 추진조직 필요(민관 전문가)
 - 건강문화클러스터, 공원녹지 조성,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 추진

비영리기관 중심의 도시재생추진

□ 기대효과

- 원도심 활성화,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
-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도시재생 및 재정비로 내수경제 활성화

■ 국정과제와의 연관성

- 국정과제110(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)
- 국정과제94(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; 도시재생)



KRIH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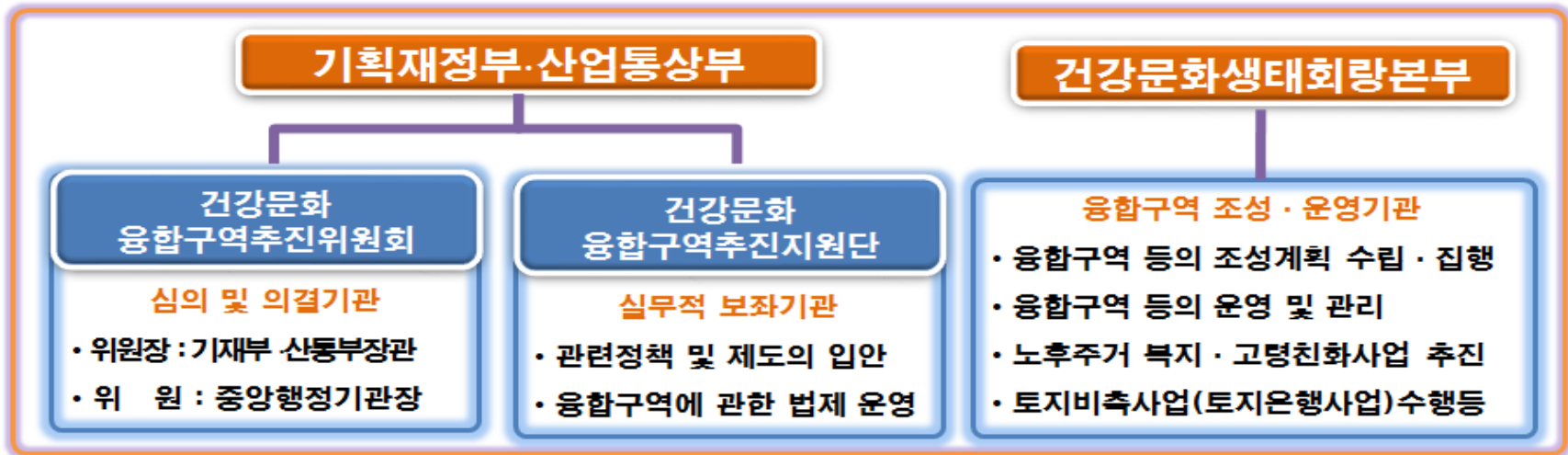
III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체계

- Ⅲ-1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추진조직 및 추진과정
- Ⅲ-2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투자소요액 추정
- Ⅲ-3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재원조달과 투자계획
- Ⅲ-4. 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추진효과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

□ 추진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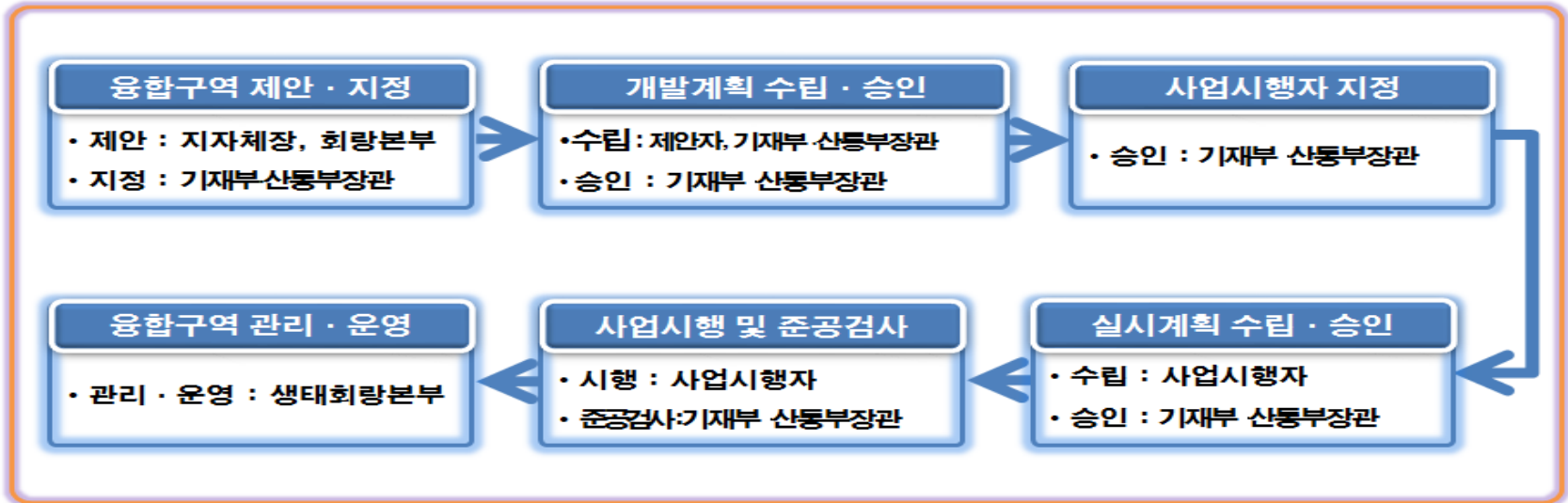


□ 사업의 추진방식

- **공원녹지 확보** : 1인당 공원녹지 20㎡ 이상 확보, 공원녹지율 45%~60% 유지
- **토지이용 방식** : 영구임대 방식의 운용을 원칙으로 가처분 토지의 80% 이상을 임대
- **시민참여 방식** : 시민·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의 고유 자산인 시민자본 형성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

□ 사업의 추진과정



□ 지원사항 :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추진(협동조합 방식)

- 저출산 고령화 대응, 한류기반의 의료문화관광산업 육성,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⇒지역간 협력 및 기능분담체계 필요, 자원의 한계극복
- 경제자유구역, 국가산업단지 보다 지정 용이, 효율적이고 강력한 종합개발 지원
- 개발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투자, 매칭펀드방식의 지방비 부담 없음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

□ 투자 소요액 추정

- 건강문화클러스터 1개소(300만평 기준) : 약 10조원 내외 소요
- 2030년까지 전국 40여 개소, 총 투자비 : 약 428조원

구 분	여	1개소 기준	전국(40여개소)
1. 건강문화생태회랑		30,036	1,201,440
• 조사·구조물·조경 등	13~20만원/㎡	12,136	485,440
• 부지매입비	18~48만원/㎡	17,900	716,000
2. 노인주거복지시설	2,500명×15평×30개소		
• 건축비	600만원/평	67,500	2,700,000
3. 첨단의료보건시설			
• 종합병원 및 보건의료 센터	5000억원*1개소, 150억원*30개소	9,500	380,000
합 계		107,036	4,281,440

주1) 주거복지시설 건축규모(연면적) : 2,500명×15평×30개소=112.5만평

주2) 건축비(450만원/평) 인 경우 : 1개소 50,625억원, 전국 2,025,000억원 소요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체계

□ 연차별 기금 적립액 추정

연간가입 인원	납입금	월별 총적립액(억원)	연간 총적립액(억원)
· 40만명(1차 연도)	20만원/인	800	9,600
· 100만명(3차 연도)	20만원/인	2,000	24,000
· 360만명(5차 연도)	20만원/인	7,200	86,400

□ 재원조달액 추산(2030년)

가입자연령 및 인원	추산액(조원)	비 고
20세~59세 (총 400만명)	162	노후복지저축 납입액 (납입 미완료 인원)
60세~64세 (총 50만명)	50	기 저축 납입액 (납입 완료후 입주대기 인원)
65세~94세 (총 300만명)	300	입주 보증금 (시설 입주인원)
총 계 (총 750만명)	512	보증금 및 저축납입액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

□ 지역별 투자계획

- 건강문화클러스터는 투자액 기준 수도권에 35%, 비수도권에 65%를 배정 ⇒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
- 2030년 노인인구의 25%인 300만명을 시설에 유치할 경우, 총투자액은 428조 1400억 원 추정, 이 중 수도권에 149.8조원(35%), 지방에 278.34조원(65%) 투자 예정

구 분	건설규모(안)	투자규모(안)	인구규모
수도권	10 개소	149.80 조원	23,964 천명
강원권	2 개소	17.4 조원	1,504 천명
대전 충청권	7 개소	60.89 조원	4,979 천명
광주 전라권	7 개소	60.89 조원	5,205 천명
대구 경북권	6 개소	52.19 조원	5,174 천명
부산 · 울산 /경남권	8 개소	69.59 조원	7,884 천명
제주권	2 개소	17.4 조원	560 천명
총 계	42개소	428.14조원	49,270천명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클러스터 프로젝트

□ 추진효과 : 2030년까지 국토·도시부문에서 약6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

- 도시공원화(둔산정책 포함) 대상1400조원의 60% 규모인 800조원 투자효과, 고용창출약100만명
- 2030년 노인인구의 25%인 300만명 시설에 유치, 총투자액은 428조 1400억 원 추정
 - 수도권에 149.8조원(35%), 지방에 278.34조원(65%) 투자 예정 ⇒국토 균형발전에 기여
 - 고령친화산업 등 총고용창출은 직접고용 약 100만명, 간접고용 200만명
- 의료문화관광기반구축에 85조원 이상 투자집행시 105만명 이상 고용창출
-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가 정비될 경우 약 10만명의 고용 발생

사업내용	(둔산정책) 도시공원화	고령친화산업	의료문화관광		도시재생	통일기반
			일반	의료		
투자규모	1400조원	428조원	80조원	(4~5조원)	1000조원	1000조원
고용창출	100만명 (2012)	300만명 (2030)	100만명 (2020)	5.4만명 (2020)	10만명 (2012)	-

* *투자(시장) 규모 및 고용창출효과는 추정치임., 사회인프라 투자액 약100조원은 포함하지 않음

** 의료의 투자규모란은 외화가득액임, (()은 투자규모의 기준연도임



KRIHS

IV

결론

- IV-1. 지역이 창조의 중심, 문화중심의 특색있는 발전
- IV-2.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가치중심의 지역발전
- IV-3. 지역발전의 새로운 제도개선 필요

지역이 창조의 중심, 문화중심의 특색있는 발전

□ “우리는 지금 **지역이 창조의 중심이 되는 시대**의 그 중심에 서 있다!”

- 지방의 재정확보는 중요한 과제 : 재정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필요
재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, 정책아이디어 발굴, 정책의지가 더 중요
 - 지역의 가용자원을 확대 재생산하고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, 고갈되지 않는 자원발굴
 - 한 지역이나 국가가 흥했을 때와 쇠퇴했을 때의 인적·물적 자원을 비교해보면, 인구, 자원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꿈과 희망이 있는지와 자원을 동원하는 시스템에 좌우됨(삼국지 교훈)

- 문화 · 관광 중심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 ⇒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
 사람이 우선이고 그 중심이 되는 지방의 문화를 꽃 피울 때,
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, 돌아오는 곳으로, 행복과 여유로움의 가치실현
 - ☞ 지역의 꿈과 비전을 먼저 만들고(지역발전모델 구축) ⇒ 시민자본 유치
 - ⇒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기반 확충 ⇒ 외국인 의료문화관광객 수용

시민의 자발적 참여,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가치중심의 지역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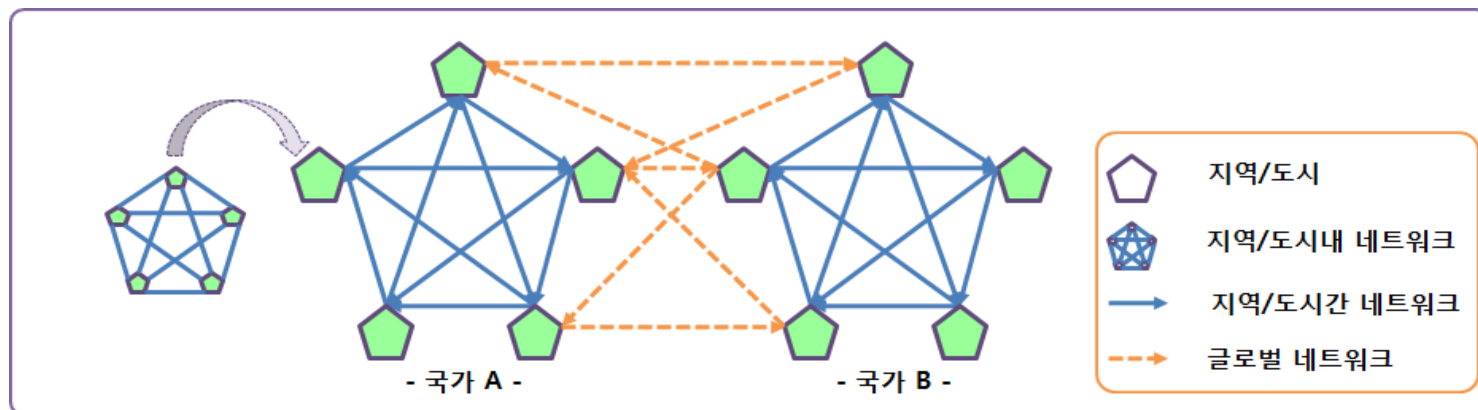
□ “무엇을 격발사업으로 할 것인가?!”

- “**치산녹화사업**”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(FAO)에서는 가장 단기간에 산림녹화를 이룩한 국가로 평가 하고 있음
 - 현재 산림치유 및 휴양 · 관광을 위해 산림복지단지 조성, 휴양림, 숲유치원으로 기능
- **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확충은 새로운 시민자본 형성의 기회**
 - 환지방식을 통한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확충과 연계한 숲 가꾸기
 - 둔산정책 필요; 소유중심에서 탈피, 이용중심의 산지이용체계 확립
- **고령화 대책 + 숲 가꾸기 + 의료문화관광의 결합은 훌륭한 정책 궁합**

시민의 자발적 참여,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가치중심의 지역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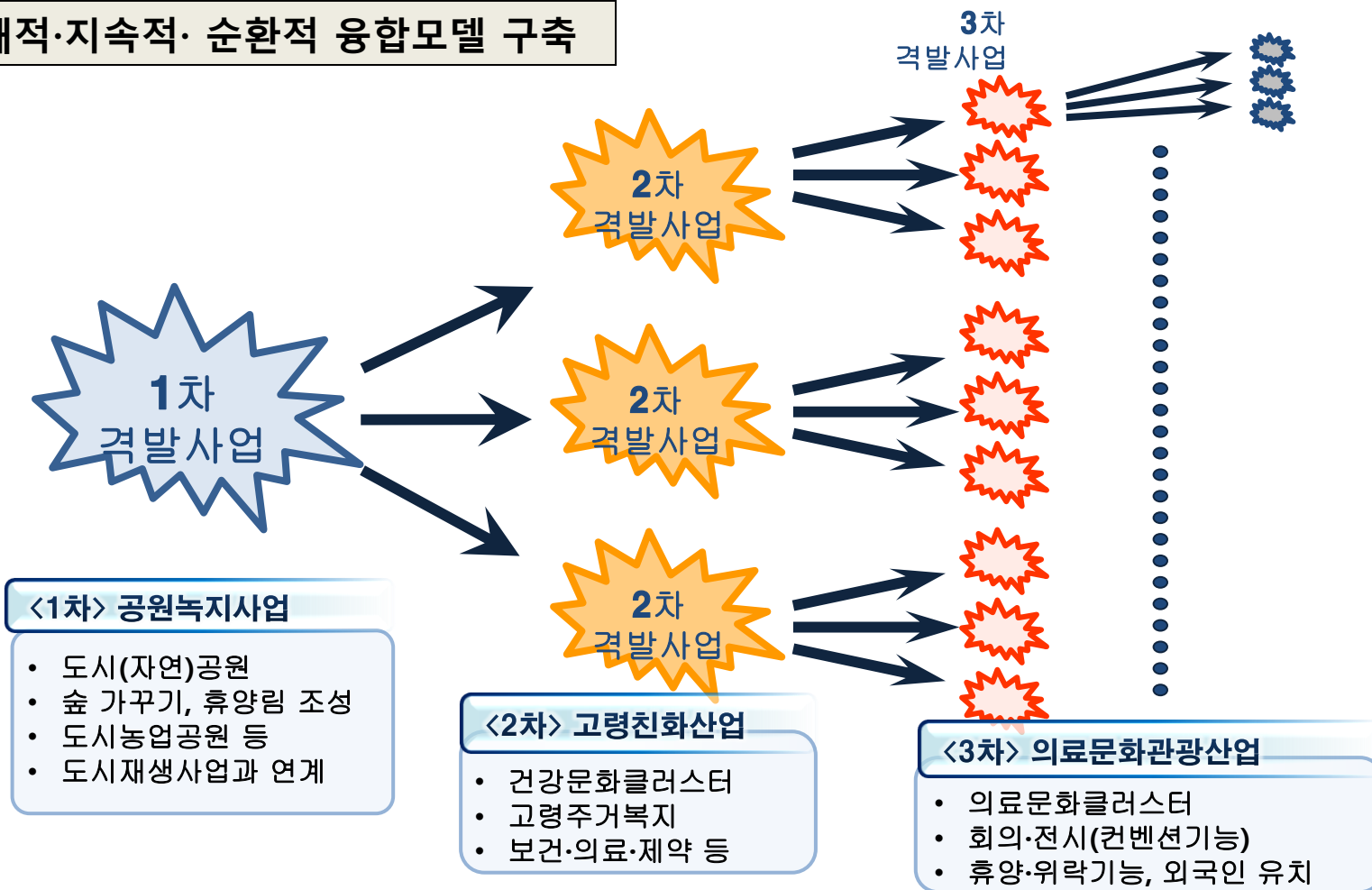
□ 지역실정에맞는시민참여형비즈니스모델구축,지역간연계협력을통한공유가치실현

- 지식, 교통, 정보통신의 발달은 개인, 기업, 정부 등 경제주체간의 협력 중시
 - 작고 보잘 것 없는 자원도 연계 ·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 발생(지역, 주민, 자원, 비전(의지))
- 글로벌 네트워크, 지역/도시간 네트워크, 지역/도시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(고령화, 복지, 고용, 성장)
 - 개별 도시(지역) 혹은 개별 국가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건강 · 환경문제, 경제협력 과제 대두
 - 글로벌체제하에서 고립된 폐쇄체제로는 번영은 물론 결코 생존할 수 없음



시민의 자발적 참여, 시민자본 형성을 통한 가치중심의 지역발전

연쇄적·지속적·순환적 융합모델 구축



지역발전의 새로운 제도개선 필요

- 모든 제도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때 생명력을 갖는다 ⇒ “건강문화융합구역” 도입,
 ⇒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수단, 자원조달, 집행체계 마련
 ⇒ 제도 개선 필요, 투자·관리시스템 혁신
- 자연공원구역, 개발제한구역, 보존산지, 농업진흥지역, 비오톱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 점증
 - 공익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은 단순히 기능별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일정한 면적의 특례개발을 통해 오히려 보존중심의 토지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음
 - 투자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국토·도시부문에서 6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가능
 – 부채과다, 저금리,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정·금융·조세정책 한계직면, 공간정책 필요

사업내용	(둔산정책) 도시공원화	고령친화산업	의료문화관광		도시재생	통일기반
			일반	의료		
투자규모	1400조원	428조원	80조원	(4~5조원)	1000조원	1000조원
고용창출	100만명 (2012)	300만명 (2030)	100만명 (2020)	5.4만명 (2020)	10만명 (2012)	—

건강·의료·문화 복합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

IV. 결론

대내외 트렌드

국토·도시 부문 주요 이슈

❖ 초고령 사회 진입

- ✓ 1999, 2017, 2026
- ✓ 농어촌은 2003년 기 진입

- 노인 빈곤율 최악 ↑
▶ 우리나라 49.2%
(OECD 평균 11.6%)

- 붕괴되는 지방경제/문화
▶ 지방문화의 계승자가 없다

- 도시환경의 지속적 악화
▶ 아토피 환자, 미세먼지, 대기오염 ↑

- 공원·녹지등급제일몰제 임박
▶ 2020.06.30

- 기후변화 및 도시방재·안전
▶ 우리의 도시가 위험하다

- 탈북난민이 몰려온다
▶ 남한내 유연한 정착방안

현황·여건

❖ 정부는 돈이 없다

- ▶ 국가·공기업 부채 지속 증가

정부(중앙·지방) 재정만으로는 근본적 한계

- 투자되지 못하는 시중자금 넘쳐

- ▶ 금융권, 대기업 각 1,000조

- 청장년 실업률 역대 최고

- ▶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비전 필요

- 노인의료비 급증
→ 국가 제정 압박 수준

- ▶ 2004년: 375만명 / 5조 1,364억
2013년: 500만명 / 18조 565억

-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

- ▶ 도시 재생은 지지 부진
→ 기획, 재생자금, 추진력?

- 산지의 방치/여가, 휴양 수요 급증

- ▶ 국토의 63.8% 산지

- 밀려오는 한류 관광객 넘친다

- ▶ 의료문화관광 기반은 취약

- 통일 기반 조성 시급

- ▶ 통일대박 언제하나? 2024

대응전략

❖ 성장·성숙을 통한 시민·복지사회 발전

- ▶ 시혜적 복지는 밑바닥 독에 물붓기

새로운 대안 ↓ 돈 버는 복지 일자리 창출

- 도시 공원화 전략
▶ 토지 확보, 시민건강
▶ 기후변화 대응
▶ 문산정책, 도시방재
▶ 도시숲가꾸기 산림휴양
▶ 국토 품격 향상

- 시민자본 형성, 기금 조성

- ▶ 수익자 부담(세대간 분담)
▶ 고령친화산업 육성
▶ 건강문화 클러스터
▶ 자연산업 기반의 지역발전모델
▶ 주거중심 탈피 + 의료 + 문화 + 산업

- 의료 문화 관광 클러스터

- ▶ 의료 기기 제약 산업 육성
▶ 의료서비스 향상
▶ 개별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
▶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
▶ 고유문화, 지속가능한 지역발전
▶ 문화! 관광대국 KOREA!!

- 건강문화융합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안)

- 기획, 재원조달, 집행체계 마련, 미래 가치·시민 행복 중심의 사업 추진

목표·기대효과

❖ 화려한 황혼의 보장

- 노인은 젊은이의 미래모습 문화의 계승자, 사회멘토

- 계속 확장되는 복지
- 복지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
- 자랑스런 복지국가로 발전
- 아프지 않고, 외롭지 않고, 보람차게

-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일자리 창출 (300만개)
- 일자리는 최대 복지, 행복출발점

- 지방 문화의 복원·활성화
- 지방이 창조·문화의 중심
- 궁궐양식의 한옥타운·호텔
- 특색있는 지역발전

- 노인 친화 산업 육성
-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
- 고갈되지 않는 자원 발굴

-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, 지역 균형 발전
- 사람이 우선, 청년들이 오는 곳으로
- 건강·의료·문화관광 기반 발전 전략

지역발전의 새로운 제도개선 필요

『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, 도시공원 부족, 저출산
고령화, 쾌적한 생활환경, 외국인 의료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..』

국토 · 도시 부문의 이슈를 다 함께 해결할 대안 마련 필요

“도시공원 · 녹지 부지, 개발제한구역, 농지 · 보전산지 등에서의 개발행위
등에 관한 특례” 도입, 시민자본 형성 필요

- 건강문화융합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안) 제23조, 제2조, 제45조
- 공원녹지 조성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격발효과를 통해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

감사합니다